

주간 통일정세

2018-15

Contents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2. 남북 교류협력

II. 북한정세

1. 정치
2. 군사
3. 경제
4. 사회문화
5. 외교국방

I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V.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 개요

| 분류 | 일자 | |
|----------------|-------|---|
| 평화 관련 주요 동향 | 4.8. | '평화수역 염원' 서해 5도 어민들 어선에 한반도기 단다(연합뉴스) |
| | 4.10. | RFA "'북미회담 평화협정 논의' 백악관청원 서명 10만명 넘어"(연합뉴스) |
| 남북 교류협력 | 4.10 | 이병현 대사 "유네스코서 남북관계 좋다...화해협력 노력 확대"(연합뉴스) |

■ 주간 동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가. 남북한

2018. 4. 8.

■ ‘평화수역 염원’ 서해 5도 어민들 어선에 한반도기 단다(연합뉴스)

- 8일 서해 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백령도선주협회는 지난 6일 용진군 백령도 장촌포구에서 ‘서해 5도 한반도기’ 게양식을 열고 이 같이 결정함.
- 어민들은 앞으로 안전한 조업과 서해 어장 확장 등 평화수역에 대한 염원을 담아 어선에 서해 5도 한반도기와 태극기를 달고 조업에 나서는데, 서해 5도 한반도기는 기존 한반도기에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추가한 새로운 깃발로, 인천 시민대책위가 만들었음.
- 백령도선주협회에 이어 대청·연평도선주협회도 이달 중 서해 5도 한반도기 게양식을 열고 조업에 나설 예정임.

나. 국제사회

2018. 4. 10.

■ RFA “북미회담 평화협정 논의 백악관청원 서명 10만명 넘어”(연합뉴스)

-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논의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백악관 청원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RFA는 지난달 15일 미국 백악관의 인터넷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한반도 평화협정 촉구 청원’이 개설됐으며, 9일(현지시간) 현재 1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서명했다고 전함.
- 이 청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에 동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용기를 내어 준 것에 대해 감사와 축하를 전하며, 65년간의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항구적인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이러한 담대한 행동은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RFA는 설명함.

2. 남북 교류협력

2018. 4. 10.

■이병현 대사 “유네스코서 남북관계 좋다…화해협력 노력 확대”(연합뉴스)

-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이사회 의장인 이병현 주(駐)유네스코 대사는 9일(현지시간) “유네스코에서의 남북 관계도 좋다”면서 교육·문화부문의 협력을 통한 평화증진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이 대사는 이날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주최한 집행이사회 의장 취임 리셉션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소프트파워의 원천인 교육·과학·문화 분야의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 특히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해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함.
- 이 대사는 북한 대표부와는 주요 외교행사와 유네스코 회의 석상에서 자연스럽게 접촉한다면서 “김용일 주 유네스코 북한대사로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돼 통일이 앞당겨졌으면 한다는 덕담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전했는데, 김용일 유네스코 북한대사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 북·미 접촉의 북측 실무자로 일하는 등 북한에서도 북·미 문제에 정통한 인물로 전해짐.

II 북한정세

■ 개요

| 분류 | 일자 | |
|-----------------------------------|---|--|
| 정치 | 47. | 北김정은, 삼지연관현악단에 악기 선물...“창설자 총지휘자”(연합뉴스) |
| | | 박봉주동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과 세포지구 축산기지 현지료혜(조선중앙통신) |
| | | 조선정부대표단 뚜르크메니스탄 도착(조선중앙통신) |
| | 49.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의 강성변영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로동신문) |
| | 410. |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었다(조선중앙통신) |
| | | 리용호 북한 외무상, 모스크바 도착...러시아 안보회의 수장 만나(연합뉴스) |
| | | 北외교관 “비핵화,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 수 있다” 첫 언급(연합뉴스) |
| | | 사회주의를 사랑하노라(로동신문) |
| | 411. | 조선외무상 로씨야외무상과 회담(조선중앙통신) |
| | 412. | 중앙보고대회 진행(조선중앙통신) |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 진행(조선중앙통신) | | |
| 413. | 리용호 북한 외무상 3박4일 방러 일정 마무리...타지크로 출발(연합뉴스) | |
| 군사 | 47. | 38노스 “영변 실험용 경수로 초기운전 임박한 징후 없어”(연합뉴스) |
| 경제 | 49. | VOA “남포 일대에 새 석탄 야적장 민간위성에 포착”(연합뉴스) |
| | | 中, ‘대량 파괴무기 활용가능품목’ 대북수출 금지...제재 이행차원(연합뉴스) |
| | 410. | “북한-러시아 극동 작년 교역액 전년보다 82% 증가”(연합뉴스) |
| | 411. | 中, 올해 1~2월 정제유 제품 1천600t 北에 공급(연합뉴스) |
| | 412. | VOA “남포 일대 유류저장시설 확장 정황 포착”(연합뉴스) |
| RFA “北주민 1천50만명 작년 기근에 시달려”(연합뉴스) | | |
| 사회 문화 | 413. | 시대와 음악예술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 2018 진행(로동신문) |
| 외교 국방 | 47. | EU, 대북제재명단에 기관 21곳 등 추가...안보리결의 이행(연합뉴스) |
| | | RFA “유럽 경제전문기자 10여명 10일 방북”(연합뉴스) |

| | |
|-------|--|
| 48. | 北TV, '김정일과 시진핑 부친' 만남 기록영화 방영 눈길(연합뉴스) |
| 49. | "북, 백악관에 '비핵화 논의 의향 직접 전달'...미측 확인(연합뉴스) |
| 4.10. | 트럼프 "5월 또는 6월초 김정은과 회담...비핵화 합의 희망"(연합뉴스) |
| | RFA "'북미회담 평화협정 논의 백악관청원 서명 10만명 넘어'(연합뉴스) |
| 4.11. | 美국무부 "단계적 접근 모두 실패"...'비핵화 대담한 행동' 강조(연합뉴스) |
|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전략부장이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이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된다(조선중앙통신) |
| | RFA "스웨덴, 북한산 석탄밀수 자국 기업 조사"(연합뉴스) |
| 4.12. | 北, 북-러 외교장관회담 보도..."협조관계 발전에 일치"(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 일자 | 보도내용 | 수행자 | 비고 |
|-------|-------------------|--|----|
| 4.10.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 김영남, 최룡해, 김평해, 태중수, 리수용, 박광호, 박봉주, 리명수, 양형섭, 박영식, 김영철, 김여정 |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8. 4. 7.

■ 北김정은, 삼지연관현악단에 악기 선물…“창설자 총지휘자”(연합뉴스)

- 노동신문과 평양방송이 7일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관현악단에 은정어린 선물 악기들을 보내주시었다”며 “선물악기 전달식이 6일에 진행됐다”고 보도함.
- 또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삼지연관현악단의 창설자-총지휘자가 되시어 우리식의 새로운 관현악단을 몸소 무어(조직해) 주시고 갓 태어난 악단의 공연준비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며 “삼지연관현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높은 예술적 기량과 성실한 연주자세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축하공연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준비하여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주체예술의 자랑찬 발전 면모를 뚜렷이 과시했다”고 소개함.
- 선물 전달식에서는 박광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전달식’을 했으며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현송월, 악장 최성일, 연주가 조은주가 ‘결의토론’을 했다고 전함.

2018. 4. 10.

■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었다(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4월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진행”됐으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 후보위원들”이 참가했고, “내각부총리들이 방청”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에 제출할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토의”했고, “다음해 국가예산편성을 검토비준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에 제출할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힘.
- 통신은 이어서 “최근 조선반도정세발전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보고”가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당면한 북남관계발전방향

- 과 조미대화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평가하시고 금후 국제관계방침과 대응방향을 비롯하여 우리 당이 견지해나갈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제시”했다고 소개함.
-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 높이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했으며, “우리 국가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 투쟁과업들을 기어이 수행함으로써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길데 대하여” 언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8. 4. 7.

■ 박봉주동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과 세포지구 축산기지 현지료해(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박봉주동지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과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운영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고 보도함.
- 통신은 “박봉주동지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는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고 전했으며,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소개함.
- 이어서 “박봉주동지는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돌아보면서 종축체계를 바로세우고 집짐승사양관리와 풀관비배관리를 짜고들어 고기와 알, 젖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덧붙임.

■ 조선정부대표단 두르크메니스탄 도착(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외무상 리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두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기 위하여 6일 아슈가바뜨에 도착하였다”고 보도함.
- 통신은 “체류기간 외무상 리용호동지는 아제르바이잔, 쓰르비아의 외무상들과 감보차 외무 및 국제협조성 국무비서를 만났다”고 전함.

2018. 4. 10.

■ 리용호 북한 외무상, 모스크바 도착…러시아 안보회의 수장 만나(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 참석했다가 인접한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국가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2박 3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위해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함.
- 리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모스크바 동쪽 외곽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식 인사들이 이용하는 접견실을 통해 공항 대합실로 나온 뒤 10시 20분께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모처로 이동했는데, 대기 중이던 한국, 일본, 러시아 취재진이 방문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해 질문 공세를 폈지만 굳게 입을 다문 채 일절 답하지 않음.
- 이날 모스크바 도착 직후 리 외무상은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우리의 국가안보실장 격)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안보회의 공보실은 “파트루세프 서기와 리용호 외무상이 동북아 지역 안보 및 안정 문제, 남북한 대화 진전 전망 등을 논의했다”고 밝힘.

2018. 4. 11.

■ 조선외무상 로씨야외무상과 회담(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 단장인 외무상 리용호동지와 쎬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외무상사이의 회담이 10일에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통신에 의하면 “회담에는 조선측에서 대표단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조선특명전권 대사, 대사관성원들이, 로씨야측에서 외무성 관계자들이 참가”함.
- 통신은 “회담에서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로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조로외교관계설정 70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호혜적인 선린협조관계를 정치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해나갈데 대하여 합의”했다고 전함.

2018. 4. 13.

■ 리용호 북한 외무상 3박4일 방러 일정 마무리…타지크로 출발(연합뉴스)

- 러시아를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3박 4일간의 모스크바 일정을 모두 마치고

- 12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국가 타지키스탄으로 출발함.
- 리 외무상은 이날 저녁 8시 모스크바 남쪽 외곽의 브누코보 국제공항에서 러시아 유테이르 항공편을 이용해 타지키스탄 수도 두산베로 출발했으며 다음 날 새벽 2시께 현지에 도착할 예정임.
 - 리 외무상은 공항에 대기하던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출국장으로 향함.

다. 주요 기관 행위

2018. 4. 12.

■ 중앙보고대회 진행(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6돛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되었다”고 보도함.
- 통신에 의하면, 이날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및 “당과 정부의 간부들, 우당 위원장, 무력기관 책임일군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중앙위원회,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했으며, “최룡해 동지가 보고”를 함.
- 보고자는 “김정은동지를 조선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조국과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며 주체위업계승완성에서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민족사적대경사”라고 강조했으며, “김정은동지는 조국의 자주적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신 주체조선의 강대한 힘이시며 21세기를 이끄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라고 하면서 모두 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고” 한 번 더 강조함.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 진행(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가 1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에 의하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및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이 참석하고,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교육, 과학연구기관 일군들이 방청”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 의안”은 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주체106(2017)년 사업정형과 주체107(2018)년 과업(보고: 박봉주),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보고: 기광호), ③조직문제였음.

[조직문제]

<소환>

- 황병서대의원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서, 김기남대의원, 리만건대의원, 김원홍을 국무위원회 위원에서 소환
- 박태성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소환
- 박태덕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에서 소환

<보선>

- 김정각대의원, 박광호대의원, 태종수대의원, 정경택대의원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
- 정영국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김수길대의원, 박철민대의원, 김창엽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보선
- 량정훈대의원, 김명길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8. 4. 9.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업적은 영원 불멸할것이다(로동신문)

- 로동신문은 9일 1면 사설에서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은 국가존립의 초석”이라며,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사설에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공화국을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것은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이라고 강조한 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정치와 군사를 능숙하게 결합시켜나가는 령도자만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강성번영으로 이끌어갈수 있다”고 주장함.

- 또 “인민군장병들은 수령옹위, 혁명보위, 조국사수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 공화국과 더불어 백승의 위훈을 떨쳐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며 “원썬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지니고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그 어떤 불의적인 정황에도 대처할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힘.

2018. 4. 10.

■北외교관 “비핵화,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 수 있다” 첫 언급(연합뉴스)

- 북한 외교 당국자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 취재진에 밝힘.
- 이 당국자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이달 5~6일 열린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행했던 인물로, 행사 기간에 비핵화 협상에 관한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함.
-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25~28일 방중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진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발언과 일치함.

■사회주의를 사랑하노라(로동신문)

- 로동신문은 10일 정론에서 “신념이 없는 사회주의는 화려한 비단보자기를 쓴 자본주의앞에 쉽게 흔들렸다”며 “사회주의원칙의 0.001mm의 양보가 그 좌절의 서막을 열어놓을수 있고 숨어있는 자그마한 병조를 소홀히 하면 몇 년, 몇십년후에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된다는 것이 력사의 교훈”이라고 밝힘.
- 신문은 “사회주의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그 모진 봉쇄와 제재책동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전진하고 비약하고있으며 오히려 강대한 국력을 만방에 떨치면서 새로운 문명강국의 천지개벽과 같은 자력자강의 기적들을 수많은 창조하고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빛나는 조국의 대경사, 영광스러운 우리 국가의 생일 일흔돛이 인민의 감격속에 다가오고있다”며 “이 사랑하는 우리의 사회주의는 또다시 70년 또 70년 이렇게 끝없이 승승장구할것”이라고 강조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8. 4. 7.

■ 38노스 “영변 실험용 경수로 초기운전 임박한 징후 없어”(연합뉴스)

- 38노스는 6일(현지시간), 지난 4일 영변 핵 단지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험용 경수로(ELWR)의 초기 운전이 임박한 것으로 관찰 가능한 징후는 없다고 밝힘.
- 이 매체는 다만 “실험용 경수로 인근의 건물 신축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해당 건물은 공학기술 지원 실험실 또는 사무용 건물인 것으로 추정함.
- 38노스는 또 단지 내 방사선 화학 실험실에서도 새로운 재처리 활동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증거는 없으며, 이 실험실에 증기를 공급하는 석탄 화력 열 발전소에서 연기가 나오거나, 실험실 냉각탑에서 증기가 나오는 모습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38노스는 그러나 5MW(메가와트) 원자로의 2차 냉각 시스템과 관련해 진행 중인 변경 작업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 원자로의 냉각수 배출구가 있는 강둑 아래에는 가로 16m, 세로 10m 크기의 직사형 모양 콘크리트 벽 기초가 들어섬(지난달 30일 대규모 땅파기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된 지 닷새 만임).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8. 4. 9.

■ VOA “남포 일대에 새 석탄 야적장 민간위성에 포착”(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구글 어스’에 공개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CNES)과 에어버스의 지난달 14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컨테이너 선적장과 북쪽으로 맞닿은 지대에 대형 석탄 더미가 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보도함.
- 석탄 더미는 가로 150m, 세로 200m 크기의 공간에서 확인됐는데 현장에는 과거에 없던 일부 건물이 들어서고 외벽이 세워졌으며, 석탄 야적장 근처에 있는 기차역에는 석탄을 운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대의 기차가 발견됐고, 그 주변으로도 과거 위성 사진에서 발견되지 않던 석탄 더미가 외벽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VOA는 밝힘.
- VOA는 지난달 14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석탄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대형 선박도 확인됐다고 밝히며, 170m 길이의 이 선박은 총 5개의 덩개 가운데 1개가 열려 있었는데, 석탄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으며, 이 선박은 지난달 13일 남포 석탄 항구에 도착해 15~16일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함.

2018. 4. 12.

■ VOA “남포 일대 유류저장시설 확장 정황 포착”(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구글 어스(Google Earth)에 공개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CNES)과 에어버스의 지난달 14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유류 저장탱크가 들어서고, 8개의 새로운 탱크도 준비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보도함.
- VOA에 따르면 지름 23m 원통 모형의 새 유류 저장탱크는 기존 탱크와 선착장 사이에 있으며 바로 옆에는 초록색 지붕의 건물도 세워졌으며,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는 8개의 새로운 유류 저장탱크가 준비되는 정황이 발견됨.
- 선박 접안시설도 변화가 관측됐는데, 남포 유류 저장시설에는 과거 두 갈래로 부두가 만들어져 있었으나 이번 위성사진에는 가운데 한 개의 대형 부두가 마련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 부두에는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10대의 중대형 선박들이 서로 맞댄 형태로 정박해 있었다고 VOA는 전함.

■ RFA “北주민 1천50만명 작년 기근에 시달려”(연합뉴스)

- 북한 전체 주민의 41%에 해당하는 1천50만명이 작년에 기근에 시달린 것으로 추산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공동 발표한 ‘2018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식량위기단계’(food insecurity level)를 가장 심각한 5단계부터 가장 양호한 1단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산된 수치는 식량 부족이 ‘걱정스러운 수준’(worrying level)인 2단계 이상을 모두 합친 것으로, 2016년 보다 50만명 더 증가함.
- 보고서는 이미 식량난이 만연한 북한에서 심각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의 식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보고서는 또 북한을 ‘외부로부터 식량 원조가 필요한 위기국’으로 분류된 37개국에 포함시킴.

다. 대외 경제 관계

2018. 4. 9.

■ 中, ‘대량 파괴 무기 활용기능품목’ 대북수출 금지…제재 이행차원(연합뉴스)

- 최근 북중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중국이 대량 살상용 무기로도 활용이 가능한 32개 품목에 대해 8일부터 대북 수출을 금지함.
- 중국 상무부는 8일 공업화신식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국방과학기술공업국과의 공동 공고에서 이런 대북 제재 시행을 발표함.
- 상무부는 공고에서 “유엔 안보리 2375호 결의 이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규모 살상 무기와 탑재 장비로 활용 가능한 품목과 기술, 재래식 무기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대북수출을 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힘.
- 이번에 대북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고리형 자석, 핫셀, 방사선 조작 시 사용하는 장갑 케이스, 중자학 계산 및 소프트웨어, 입자 가속기, 방사선 탐측 설비, 질량 분석 장치, 지진 탐측 설비 등임.

2018. 4. 10.

■“북한-러시아 극동 작년 교역액 전년보다 82% 증가”(연합뉴스)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지난 4일 러시아 극동세관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간 작년 교역액이 약 1천508만달러로, 전년도 827만달러보다 약 82%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연해주, 사할린, 하바롭스크, 아무르주 등 러시아 극동지역이 지난해 북한에 수출한 물품의 금액은 약 1천507만달러로, 전년도 534만달러보다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금액은 6천400달러에 그쳤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러시아 극동지역이 북한에 수출한 물품들은 석유 및 석유제품과 광물성 연료가 722만달러로 금액이 가장 컸으며 식용류(297만달러), 수산물(243만달러), 곡물류(57만달러), 기타 식품류(28만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음.

2018. 4. 11.

■中, 올해 1~2월 정제유 제품 1천600t 北에 공급(연합뉴스)

- 중국이 지난 1~2월 북한에 정제유 총 1천600t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남.
-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월 201t, 2월 1천392t의 정제유 제품을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함.
-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대북 정유제품의 공급량 상한을 연간 50만 배럴로 줄이면서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원유와 정제유의 양과 금액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함.
- 중국이 올해 북한에 제공했다고 밝힌 정제유를 배럴로 환산하면 1월에는 1천500배럴, 2월에는 1만 배럴 정도임.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8. 4. 13.

■ 시대의 음악예술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 2018 진행(로동신문)

- 로동신문은 13일 “시대의 음악예술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2018이 1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신문은 “토론회에는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쿨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문화상 박춘남 동지, 문화예술부문 일군들, 창작가, 예술인들, 예술교육기관 교원, 연구사들과 콩쿨국제심사원, 명예손님들,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여러 나라의 예술단, 대표단성원들이 참가하였다”고 언급함.
- 신문에 의하면 토론에서는 “현시기 음악창조에서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성악가들이 올바른 미학관을 지니고 예술형상에 자기 민족의 감정정서와 현대적미감을 잘 반영하여야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될수 있다고 강조”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8. 4. 9.

■ “북, 백악관에 ‘비핵화 논의’ 의향 직접 전달”...미측 확인(연합뉴스)

-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언론들은 8일(현지시간) “미국 측이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기꺼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한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함.
- 로이터통신은 “북미 간 비밀접촉에서 평양 측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향도 직접 미국에 전달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도 ‘북미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밀접촉을 가져왔으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향을 재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맞다고 확인함.

2018. 4. 10.

■ **트럼프 “5월 또는 6월초 김정은과 회담·비핵화 합의 희망”(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시점에 대해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그들(북한)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접촉했다”고 확인함.
-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위한 일정을 잡았다”고 보도함.

■ **RFA “북미회담 평화협정 논의 백악관청원 서명 10만명 넘어”(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지난달 15일 미국 백악관의 인터넷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한반도 평화협정 촉구 청원’이 개설됐으며, 9일(현지시간) 현재 1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서명했다고 보도함.
- 이 청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에 동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용기를 내어 준 것에 대해 감사와 축하를 전하며, 65년간의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항구적인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이러한 담대한 행동은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RFA는 설명함.
- 백악관 ‘위 더 피플’에 제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공식검토한 뒤 결과를 60일 이내에 발표해야 함.

2018. 4. 11.

■ **미국무부 “단계적 접근 모두 실패”...‘비핵화 대담한 행동’ 강조(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1일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1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어갈 수 있다는 북한 외교 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과거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고 전함.
- 애덤스 대변인은 “우리는 다르게 일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언급함.
- 그는 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전세계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면 더 밝은

길이 있다”고 덧붙임.

나. 북·중 관계

2018. 4. 8.

■北TV, ‘김정일과 시진핑 부친’ 만남 기록영화 방영 눈길(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8일 오후 6시 30분께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중국 방문 영상을 담은 기록영화를 다시 방영함.
- 이날 영상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부친인 시중권(習仲勳) 당시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후야오방(胡耀邦)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 등과 함께 베이징역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도 확인됨.
- 김정일 위원장과 시중권의 만남을 담은 이 기록영화는 북한 TV에서 2014년 6월 마지막으로 방영됐으며,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방영됨.

2018. 4. 1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이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된다(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동지가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이 조선을 방문하여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된다”고 보도함.
- 이어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첫 중국방문시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문화교류를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신 이후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중국의 관록있는 큰 규모의 예술단은 조중문화교류의 초석을 더욱 굳게 다지고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친선적인 린방의 예술사절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최고의 성심을 안고 특례적으로 맞이할것”이라고 덧붙임.

다. 북·일 관계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8. 4. 12.

■北, 북·러 외교장관회담 보도…“협조관계 발전에 일치”(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러시아 연방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 단장인 외무상 리용호 동지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상 사이의 회담이 10일에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회담에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러(북러)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부합된다는 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밝힘.
- 이어 “조러 외교관계 설정 70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호혜적인 선린협조 관계를 정치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해나갈 데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덧붙임.
- 통신은 정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담에서는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며 러시아 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화 애호적 입장과 결단’에 의해 최근 한반도에 ‘긴장 완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마련된 데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도 주장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8. 4. 7.

■EU, 대북제재명단에 기관 21곳 등 추가…안보리결의 이행(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대북제재 명단에 개인 1명과 기관 21곳을 추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7일 보도함.
- EU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선박 27척·개인 1명·회사 21곳 등 49개 대상을 추가로 제재 목록에 올린 데 따른 EU의 제재 이행 차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RFA는 전함.
- 그러면서 제재대상의 이름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9일 EU 관보에 기재된다고 덧붙임.
- 또 EU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 15척에 대한 자산 동결, 선박 25척에 대한 입항금지, 선박 12척에 대한 선적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함.

■RFA “유럽 경제전문기자 10여명 10일 방북”(연합뉴스)

- 네덜란드·벨기에·영국·독일 출신의 경제전문기자 10여 명이 대북 투자환경과 경제 협력 전망을 둘러보기 위해 오는 10~17일 방북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이 네덜란드의 투자자문회사 GPI컨설팅사의 폴 치아 대표를 인용해 7일 보도함.
- 치아 대표는 RFA에 이같이 밝히면서 방북 기자들에게는 외무성이나 경제담당 부서, 국립과학원 등에 소속된 북한 관리들과 만나 대화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전함.
 - 그는 북한이 올해 경공업과 농업 관련 산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이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함.

2018. 4. 11.

■ RFA “스웨덴, 북한산 석탄밀수 자국 기업 조사”(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스웨덴에 기반을 둔 한 회사가 지난해 1월과 7월 중국 소유 선박 ‘카이샹’(Kai Xiang)호를 이용해 북한산 석탄을 베트남에 밀수출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연례보고서를 소개함.
- 프레드릭 노르딕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다흐테르’(Dagens Nyheter)에 “이 보고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회사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중동의 한 호텔에서 이뤄지는 북한 미술품 거래가 대북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며 공식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고 RFA가 이날 보도함.

Ⅲ 동북아정세

■ 개요

1. 한반도정세

| 분류 | 일자 | 한국 | 미국 |
|-------|---------------------------------------|---|--|
| 한미 관계 | 4.11. | 한미, 오늘부터 방위비분담 2차 회의...액수·제도 본격조율(연합뉴스) | |
| | 4.12. | 정의용 방미한 날 아치도 도착...긴박한 한미일 3각 외교전(연합뉴스) | |
| | 4.13. | 정의용 "불턴과 비핵화 평화적 달성 위해 유익한 얘기 나눴다"(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한국 | 중국 |
| 한중 관계 | 4.8. | 한중 경제공동위 2년 만에 이달 개최...사드보복 해제 논의관측(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한국 | 일본 |
| 한일 관계 | 4.9. | | 대화노력 '만자' 아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연결 안됐다"(연합뉴스) |
| | 4.10. | | 日, 韓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상소'에 "유감"(연합뉴스) |
| | | | |
| | 4.11. | |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 계기 관계발전 청사진 추진(연합뉴스) |
| | | | |
| | 4.12. | | 강경화 "독도에 대한 日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어"(연합뉴스) |
| | | | "일본 왕따 될라"...日언론들, 외무상 방한 '빈손 외교' 비판론(연합뉴스) |
| 4.13. | 주일 韓대사 "日, 북일관계에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있다"(연합뉴스) | | 日언론 "아베, 文대통령에게 단독 방일 요청...고노 외무상 전달"(연합뉴스) |
| 분류 | 일자 | 한국 | 러시아 |
| 한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

2. 주변국정세

| 분류 | 일자 | 미국 | 중국 | |
|-------|-------|----|--|--|
| 미중 관계 | 4.7. | | 中언론, 美 '관세폭탄' 연일비난..“중이호랑이 두렵지 않아”(연합뉴스) | |
| | | | 中, 다음 무역전쟁 카드는?...美관광·유학 차단 만지작(연합뉴스) | |
| | 4.9. | | 中외교부 “국제사회도 美보호주의 반대...협력만이 출구”(연합뉴스) | |
| | 4.10. | | 트럼프·시진핑 모두 유화 제스처...미중 무역 갈등 일단 '냉각'(연합뉴스) | |
| | | | 남중국해 경쟁적 군사훈련...美中 항모 대치에 인도·대만도 가세(연합뉴스) | |
| | | | 中, 美의 시리아 공격 가능성에 “무력 사용에 반대”(연합뉴스) | |
| | | | 中, 아프리카 이어 남태평양에 군사기지 물색...美 호주 '긴장'(연합뉴스) | |
| | 4.11. | | 트럼프, 시진핑 유화 발언에 “고맙다...함께 큰 진전 이룰 것”(연합뉴스) | |
| | | | | 中인민은행장 “미중 무역 갈등, 위안화 절하로 해결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
| | | | | 중국 외교부 “대외개방 확대 중미 무역 갈등과 관련 없어”(연합뉴스) |
| | | | | 시진핑 보아오 앞바다서 항모 해상 열병...“남중국해 전력 과시”(연합뉴스) |
| | | | | 중국방부 “난사군도 군사 시설은 지역 평화에 기여할 것”(연합뉴스) |
| | 4.12. | | | 中 “중미, 무역갈등 어떠한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
| | | | 무역분쟁 '숨고르기'속 中 개방확대 행보 vs 美 실리따지기(연합뉴스) | 시진핑 사상최대 해상열병식서 “강대한 해군 건설” 강조(연합뉴스) |

| 분류 | 일자 | 미국 | 일본 |
|-------|-------|--|---|
| 미일 관계 | 4.13. | | 아베, 트럼프 'TPP 복귀검토'에 '담당각료 정상회담 배석' 화답(연합뉴스) |
| 분류 | 일자 | 미국 | 러시아 |
| 미러 관계 | 4.11. | 미·러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맞붙...시리아 위기감 고조(연합뉴스) | |
| | 4.12. | 트럼프 "시리아로 미사일 날아간다...준비하라" 러시아에 경고(연합뉴스) | |
| | | 푸틴, 트럼프 경고트윗에 "세상 어지럽지만 상식이 이길 것"(연합뉴스) | |
| | 4.13. | "시리아 치면 러시아와 충돌 우려"...트럼프의 공습 딜레마(연합뉴스) | |
| | 4.13. | 트럼프 이어 백악관도 "결정 안 났다"...미, 시리아 공습 고심(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중국 | 일본 |
| 중일 관계 | 4.7. | | 미중 무역전쟁 와중서 日·EU, 中겨냥 '지식재산권' 협공(연합뉴스) |
| | | | '일본판 해병대' 수륙기동단 발족식...섬 탈환훈련 공개(연합뉴스) |
| | 4.8. | | 日언론 "한중일 정상회담 내달 9일 개최 최종 조정 중"(연합뉴스) |
| | 4.9. | 中언론, 日 '수륙기동단' 발족에 "日군국주의 부활 경계해야"(연합뉴스) | |
| | 4.10. | 中리커창, 일본 무역협회장 만나 "대외 개방 확대할 것"(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중국 | 러시아 |
| 중러 관계 | | | 특이사항 없음. |
| 분류 | 일자 | 일본 | 러시아 |
| 일러 관계 | | | 특이사항 없음. |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8. 4. 11.

■ 한미, 오늘부터 방위비분담 2차 회의…액수·제도 본격조율(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함.
-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국 대표단은 지난달 1차 회의에서 상대 입장을 탐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부터 액수와 제도 개선 등을 놓고 본격적인 조율을 벌일 전망이다.
- 한미는 액수와 제도개선 방향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확인했는데 미 측의 요구 수준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현 부담액의 1.5~2배 수준을 희망한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고, 우리 측은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 하에 현행 ‘총액 기준 제공’보다는 실소요에 맞춰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2018. 4. 12.

■ 정의용 방미한 날 아치도 도착…긴박한 한미일 3각 외교전(연합뉴스)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회동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11일(현지시간), 아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일본 국가안보국장도 워싱턴에 모습을 드러냄.
-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와 관련한 사전 준비 움직임들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외교전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한일 안보수장을 미국으로 불러 모은 직접적 계기는 지난 9일 공식 취임한 ‘슈퍼 매과’ 볼턴 보좌관의 백악관 입성임.
- 우선 볼턴 보좌관의 전임자인 허버트 맥매스터 전 NSC 보좌관 시절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던 정 실장은 볼턴 체제에서도 한미 간 핫라인 구축을 위해 애초 이날 오후 볼턴 보좌관과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리아 사태로 인한 미국 측 사정에 따라 만남을 12일 오전으로 연기한 상황으로 정 실장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 들어가 NSC 측과 2시간여에 걸쳐 예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짐.

2018. 4. 13.

■ 정의용 “볼턴과 비핵화 평화적 달성 위해 유익한 얘기 나눴다”(연합뉴스)

- 미국을 전격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의 회동에 대해 “아주 유익한 얘기를 나눴다”고 이날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귀국 직전 일부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 특히 정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도 중요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 또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 “매우 유익했다”고 소개함.
- 앞서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취임 나흘째를 맞은 볼턴 보좌관과 1시간가량 회동한 것으로 새로 취임한 볼턴 보좌관과 한미 양국 안보사령탑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짐.

나. 한·중 관계

2018. 4. 8.

■ 한중 경제공동위 2년 만에 이달 개최…사드보복 해제 논의관측(연합뉴스)

-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 간 경제·통상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차관급 연례 협의체인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가 4월 중하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구체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양국 당국 간 협의 중에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한중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현황 점검, 우리나라의 신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 연계 구체 협력사업 발굴 방안, 양국의 기업애로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 한국과 중국은 1993년부터 매년 개최를 원칙으로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경제공동위를 개최해왔는데 지난해에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열지 않았으며 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 해제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함.

다. 한·일 관계

2018. 4. 9.

■ 대화노력 ‘판지’ 아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연결 안됐다”(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이달과 다음 달 예정된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과거(의 사례)에 입각할 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함.
- 그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있었지만 비핵화로 전혀 연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켰다”며 이같이 말함.
-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감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는데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물밑에서 모색하다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의도적으로 대화노력을 흠집 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2018. 4. 10.

■ 日, 韓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상소에 “유감”(연합뉴스)

-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에 불복하고 상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10일 유감을 표시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이토 겐(齋藤健) 농림수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상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WTO 협정에 반한다고 인정된 조치를 한국이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하기를 앞으로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함.
- 앞서 WTO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 합치한다고 판정 한 것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과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WTO 분쟁해결정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다”고 밝힘.

■ 日정부, 韓국회의원 독도 방문계획에 “매우 유감” 항의(연합뉴스)

- 한국 국회의원이 최근 독도 방문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본 외무성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하고 방문계획 철회를 요구했다고 NHK가 10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도쿄(東京)에 있는 한국대사관의 차석 공사에게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며 방문계획 철회를 전화로 요구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는 이날 항의 결의서를 마련,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위원장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副)대신에게 제출했던 결의서에서는 “(이번) 방문이 한일관계에 주는 영향은 매우 중대하다”며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한미일 연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힘.

2018. 4. 11.

■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 계기 관계발전 청사진 추진(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오는 10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힘.
- 이 당국자는 “양 장관은 10월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 계기에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만드는데 노력하기로 했다”며 “파트너십 선언 20주년 계기에 양국 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함.
- 1998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계기에 채택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양 정상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고노 외무상, 현충원 참배…관계개선 노력 해석(연합뉴스)

-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처음 방한한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 등 10여명의 관계자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함.
- 고노 외무상은 현충탑에 분향·묵념한 뒤 방명록에 ‘일본국 외무대신 고노 다로’와 방문 날짜를 적었는데 일본 외무상이 우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것은 14년 만으로 이번 참배는 양국 간 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옴.

■강경화 “독도에 대한 日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어”(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외교부는 회담 결과 관련 보도자료에서 “고노 외무상은 위안부 합의와 독도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혀왔으며, 강 장관은 위안부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함.
- 이와 함께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내달 일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2018. 4. 12.

■“일본 왕따 될라”…日언론들, 외무상 방한 ‘빈손 외교’ 비판론(연합뉴스)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찾아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것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회의론이 일고 있음.
- 요미우리는 고노 외무상이 한국을 방문해 한일 간 연대강화를 확인했지만 북한에 대한 압력 유지를 중시하는 일본과 대화를 우선시하는 한국 사이에서 온도차가 드러났다고 소개하며 고노 외무상이 일련의 회담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만으로 국제사회가 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압력 강화를 주장했지만, 강경화 장관은 “대화의 추진력 유지가 중요하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실는 자세를 내비쳤다고 전함.
- 특히 일본 측의 주요 현안인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고노 외무상이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루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일 관계 현안 해결과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지속해 협력하자”고만 말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일 韓대사 “日, 북일관계에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있다”(연합뉴스)

- 이수훈 주일대사가 12일 집권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일관계를 거론하며 “일본 측이 보다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이 전함.
- 이 대사는 이날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집권 자민당 당사에서 기시다 정조회

장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역내 국가의 공동 목표라며 이를 위해 남북·북미 관계와 함께 북일관계도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이 대사와 기사다 정조회장은 향후 수개월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매우 중대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함께한 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한일 간 긴밀한 의사 소통과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음.

2018. 4. 13.

■ **日언론 “아베, 文대통령에게 단독 방일 요청…고노 외무상 전달”(연합뉴스)**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최근 한국을 방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단독 방일을 희망한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렇게 전하며, 그 제안에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함.
- 한중일 정상회의 전후 한일 간 개별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아베 총리는 좀 더 시간을 들여 문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기회를 갖기 위해 별도로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일본 측은 문 대통령의 단독 방일 일정을 이르면 5월 중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짐.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8. 4. 7.

■ 中언론, 美 ‘관세폭탄’ 연일비난…“중이호랑이 두렵지 않아”(연합뉴스)

- 미국이 1천억 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더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주요 관영 매체들은 7일 미국의 조치가 말만 앞세운 허장성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함.
-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전날 상무부와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과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전하면서 “미국의 공격에 중국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대두(메주콩), 자동차 등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할 것”이라고 전함.
- 인민일보는 특히 대두를 미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으며, 중국은 지난해 미국산 대두 3천200만여톤을 수입했고, 이는 140억 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고 소개하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피해자는 미국 국민이라고 강조함.

■ 中, 다음 무역전쟁 키드는?...‘美관광·유학 차단’ 만지작(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확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미국산 대두, 자동차를 관세 부과 목록에 올린 중국의 다음 카드가 주목받고 있음.
- 미중 양국은 서로 ‘관세폭탄’을 주고받은 뒤 잠시 협상 기류가 형성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번에 중국산 수입품 1천억 달러 상당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하며 분위기를 다시 냉각시켰음.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강력한 반격을 할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결사항전 의지와 함께 “미국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같은 격렬한 언사를 내놓음.

2018. 4. 9.

■ 中외교부 “국제사회도 美보호주의 반대…협력만이 출구”(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가 국제사회도 미국의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협력만이 문제 해결의 출구라고 밝힘.
- 경쌍(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갈등 속에 보아오 포럼 참석차 방문한 각국 지도자와 국제기구 수장들이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보호주의 반대에 뜻을 같이했다면서 이런 입장을 피력함.

- 경 대변인은 우선 “현재 국제사회가 중미 무역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는 데이는 중미 양측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라면서 “각국 지도자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중국과의 회담에서 보호주의는 방법이 아니며 국제협력만이 출구로 국제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미국 대해 비난함.

2018. 4. 10.

■ 트럼프·시진핑 모두 유화 제스처…미중 무역갈등 일단 ‘냉각’(연합뉴스)

- 호진적 보복관세 난타전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갈등에 냉각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를 집약한 ‘중국 제조 2025’ 관련 1천300개 품목에 25% 고율 관세를 매기고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해 시진핑(習近平)은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다짐하면서 무역전쟁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달았으나 며칠 새 분위기가 크게 변하는 모양새임.
-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간선거에 치명상을 줄 목적으로 미국의 ‘팜 벨트’(농장지역)와 ‘러스트 벨트’(공장지대) 주(州)를 겨냥한 농축산물 및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카드까지 꺼냈던 시 주석이 10일 보아오포럼에서 유화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임.

■ 남중국해 경쟁적 군사훈련…美中 항모 대처에 인도·대만도 가세(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이 최근 동시에 남중국해 진입해 사실상 대치 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이번에는 인도와 대만이 남중국해에서 공군 및 해상 군사훈련에 나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음.
- 10일 중화권 매체 뒤웨이(多維) 등에 따르면 중국은 하이난(海南)성 보아오(博鳌) 포럼과 함께 부근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번 군사훈련은 미 항모의 남중국해 진입에 따른 대항 훈련 성격이지만,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라는 분석이 많음.
- 미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을 기함으로 하는 제9 항모강습단(CSG9)이 이달 6~7일 남중국해 남부 해역에서 싱가포르 해군과 함께 합동 군사훈련을 한 것에, 중국은 랴오닝(遼寧) 항모 의 군함 40척을 동원하고 ‘홍(轟)-6K’ 전략 폭격기 12대를 출격시켜 무력을 과시하며 맞불 군사훈련을 벌였음.

■ **中, 美의 시리아 공격 가능성에 “무력 사용에 반대”(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고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중국이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반대 의사를 밝힘.
- 경샹(耿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적 수단은 해결책이 아니다”며 “중국은 일관되게 시리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국제 관계에서 걸핏하면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위협을 하는 것에 반대 한다”고 말함.
- 경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시리아 화학 무기 사용 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면적 조사를 지지 한다”면서 “과학적 방식의 조사와 확실하고 유력한 증거에 근거해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검증이 가능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함.

■ **中, 아프리카 이어 남태평양에 군사기지 물색…美 호주 ‘긴장’(연합뉴스)**

- 중국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 바누아투에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해 미국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음.
- 중국의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태평양에 첫 군사기지를 두는 것이며 해외 군사기지로 는 작년 7월 아프리카의 소국 지부티에 2번째가 되는 것임.
-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 기지화 하는 동시에 강군 건설을 위한 ‘군사굴기(掘起·우뚝 섬)’를 외치는 중국이 태평양에서도 군사적 팽창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되자 미국과 호주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2018. 4. 11.

■ **트럼프, 시진핑 유화 발언에 “고맙다…함께 큰 진전 이룰 것”(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동차를 포함한 수입품 관세를 낮추고 수입 물량도 확대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점을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표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세와 자동차(무역) 장벽에 관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사려 깊은 발언과 지식재산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그의 깨달음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 한다”고 말하며, “우리는 함께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함.
- 이에 따라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달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중국의 후퇴로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낙관론이 힘을 얻으며 이 같은 기대감에 뉴욕과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섬.

■ **中인민은행장 “미중 무역갈등, 위안화 절하로 해결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이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 위안화를 평가절하 하는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밝힘.
- 11일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이강 인민은행장은 이날 하이난(海南)성 보아오(博鰲)진의 보아오 포럼에서 “중미 무역 마찰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이므로 반드시 이성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절하 방식으로 무역갈등을 해결하지 않겠다”고 말함.

■ **중국 외교부 “대외개방 확대 중미 무역갈등과 관련 없어”(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보아오(博鰲) 포럼 개막연설에서 대외개방 확대 조치를 발표한 것이 미국과 무역갈등으로 인한 압박 때문이라는 해석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 정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명확히 당신에게 말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개방 확대와 관련한 중요 조치는 중미 무역충돌과 무관하다”고 일축함.
- 정 대변인은 “이러한 중대 조치를 발표하려면 반복적인 준비와 주도면밀한 계획,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대외개방 입장 견지는 기본 국가 정책이자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라며 “중국 개방의 대문은 닫힐 수 없고, 갈수록 더 열릴 것이라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함.

■ **시진핑 보아오 앞바다서 항모 해상 열병…“남중국해 전력 과시”(연합뉴스)**

- 홍콩 빈과일보는 10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아오포럼 연설 직후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인 항공모함 랴오닝(遼寧) 전단을 상대로 해상 열병에 나섰다 보도함.
- 시 주석은 보아오진에서 머지않은 충하이(瓊海)시 탄면(潭門)진으로 이동해 현지 시찰활동을 하면서 이들 함대를 상대로 관함식(觀艦式·국가원수가 직접 자국 함정을 검열하는 행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 시 주석이 랴오닝함 함상에 올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최고지도자가 이처럼 해상 열병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임.

■ **中國방부 “난사군도 군사 시설은 지역 평화에 기여할 것”(연합뉴스)**

- 중국 국방부는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중국 명 난사<南沙>군도·필리핀 명 칼라얀 군도·베트남 명 쯔영사군도)에 국방시설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이며 다른 나라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힘.

- 미국의 한 매체는 중국이 국제적인 영토분쟁지역인 스프래틀리 군도 내 인공섬인 미스치프 암초의 요새화된 전초기지 2곳에 통신과 레이더 시스템 교란 장비를 설치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런궈창(任國強)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관영 차이나데일리에서 “난사군도는 중국의 영토이며 이런 섬들에 필요한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적절한 권리에 속 한다”고 말함.
- 런 대변인은 “이들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강화는 주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함으로써 지역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런 시설이 다른 어떤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중국은 결연히 평화 발전의 길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이며 중국이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에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호주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선 강하게 부인함.

2018. 4. 12.

■ 中 “중미, 무역갈등 어떠한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 보아오(博鰲) 포럼에서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한 중국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등으로 촉발된 무역갈등을 해결하려면 미국이 협상에 대한 성의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밝힘.
-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갈등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중미 무역갈등과 관련해 양국 경제 관료 사이에 어떠한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함.
- 가오 대변인은 “협상에는 원칙이 있다”면서 “현재 미국은 협상을 위한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어서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틀 안에서 협상으로 무역갈등을 해결하려면 미국이 WTO와 다자주의 원칙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미국이 자기 고집대로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함.

■ 무역분쟁 ‘숨고르기’속 中 개방 확대 행보 vs 美 실리따지기(연합뉴스)

- 미중 무역 갈등 위기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개방의 보폭을 확대하면서 관영 언론을 통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으라며 압박 공세를 펴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의 이런 태도를 반기면서도, 상황을 관망하는 가운데 일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보아오포럼에서 밝힌 개방 확대 선언과 더불어 중국 당국이 내놓은 ‘청사진’을 꼼꼼히 살피면서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어 보임.

- 중국산 수입품 1천300개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하려면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6월초까지는 여유가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현미경 검증’으로 중국의 조치를 검토한 뒤 대중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 됨.

■시진핑 사상최대 해상열병식서 “강대한 해군 건설” 강조(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열린 중국 군 사상최대 규모의 해상열병식에 참가했다고 중국중앙(CC)TV 인터넷 판인 양시망(央視網)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고 지휘부인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서 해상열병식을 개최했는데 미중 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대치한 와중에 열려 관심을 끌었음.
- 군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하는 시 주석은 부대 사열 후 연설에서 “신시대의 노정에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실현의 분투 가운데서 강대한 인민 해군을 건설하는 임무가 오늘날처럼 긴박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철저히 관철하고 개혁강군, 과학기술 군 진흥, 의법치군, 확고부동한 해군 현대화 여정의 가속화를 달성하며, 인민해군이 세계일류 해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나. 미·일 관계

2018. 4. 13.

■아베, 트럼프 ‘TPP 복귀검토’에 ‘담당각료 정상회담 배석’ 화답(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7일부터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정상을 배석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13일 전함.
- 아베 총리는 모테기 경제재정상을 17-18일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 동석시켜 TPP 추진과정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게 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는 TPP 담당각료로 미국이 빠진 11개국 체제의 TPP 체결을 주도한 인물임.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TPP 협정 내용 수정을 전제로 복귀를 언급했으며 이날도 “우리 방식대로여야 한다”며 재협상을 조건으로 복귀검토를 지시했고, 반면 아베 일본 총리가 그동안 미국과의 재협상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TPP 문제가 양국 대화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니혼게이지는 전망 함.

다. 미·러 관계

2018. 4. 11.

■미러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맞붙…시리아 위기감 고조(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자국의 입장을 담아 제출한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10일(현지시간) 모두 부결되며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전선이 뚜렷해졌고, 시리아의 군사적 위기감은 한층 고조된 양상을 보임.
-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미국이 마련한 ‘시리아 결의안’ 표결에 들어갔으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 서방이 주도하는 대(對) 시리아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2번째임.
- 곧이어 러시아가 제출한 또 다른 ‘시리아 결의안’이 상정되자, 이번에는 미국·영국·프랑스가 일제히 거부권을 행사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주고받으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함.

2018. 4. 12.

■트럼프 “시리아로 미사일 날아간다…준비하라” 러시아에 경고(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를 공습할 것이라며 11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을 통해 “멋지고 새로운, ‘스마트’한 미사일이 갈 것이니, 러시아는 준비하라”고 러시아에 경고장을 날림.
-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시리아를 겨냥한 미사일은 어느 것이든 격추한다고 다짐했다”면서, 미사일을 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어 “너희(러시아)는 자국민을 죽이는 걸 즐기는 ‘독가스 살인 짐승’의 조력자가 되면 안 된다!”고 비난함.
- 앞서 레바논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자시프킨은 헤즈볼라 매체 알마나르TV와 인터뷰에서 “미군이 공습한다면, 미사일이 요격당할 것이고, 발사 원점도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음.

■푸틴, 트럼프 경고트윗에 “세상 어지럽지만 상식이 이길 것”(연합뉴스)

- 푸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러시아 주재 신임 대사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와 시리아를 겨냥한 위협성 발언에 “상식이 이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AP와 AFP통신 등 외신이 전함.
- 푸틴 대통령은 “지금의 국제 현안들이 불안감을 자아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세계의 상황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식이 이기고 국제관계가 세계의 모든 시스템이 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함.

-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예민한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궁 대변인은 “우리는 트위터 외교의 참여자가 아니며 신중한 접근법의 옹호자들”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시리아) 상황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보를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스마트 미사일은 자국 영토에서 몇 년간 국제테러리즘과 싸우고 있는 합법적 정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을 향해 날아가야 한다”고 말함.

■“시리아 치면 러시아와 충돌 우려”...트럼프의 공습 딜레마(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받는 시리아에 군사 공격을 공개 경고했지만, 실행에 옮길 경우 러시아와의 전면전 등을 초래할 위험도 작지 않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진단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24~48시간 이내에 어떤 중대 결정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 결정을 매우 빨리 내릴 것”이라고 공언했고, 이들이 지난 11일에는 “멋지고 새로운, ‘스마트’한 미사일이 갈 것”이라며 호언장담까지 했음.
- 이 때문에 미국 안팎에선 시리아 공습이 임박했다는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두 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시리아 군대가 최근 주력 항공기 일부를 러시아 기지로 이동 배치했다고 전했는데 이는 미군이 시리아를 공습하더라도 러시아 기지만큼은 공격을 주저할 것이라는 분석에 의해서임.

2018. 4. 13.

■트럼프 이어 백악관도 “결정 안 났다”...미, 시리아 공습 고심(연합뉴스)

- 시리아 공습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시리아 공격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한 적 없다”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백악관도 “최종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힘.
- AFP통신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국가 안보팀과 회의를 했으나 “최종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하며, 이어서 그는 “우리는 계속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오늘 저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힘.

-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들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대 시리아 군사 확대 전략에 대한 주의와 숙고를 촉구하며 동맹국들의 참여를 더 끌어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전함.

라. 중·일 관계

2018. 4. 7.

■미중 무역전쟁 와중서 日·EU, 中겨냥 '지식재산권' 협공(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불공정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중국의 관계 법령을 들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할 가운데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미국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중국을 겨냥한 '지식재산권 협공'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선언을 시작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EU가 지재권 분쟁에서 미국 측에 가담한 모양새여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됨.
- 홍콩의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교도, AP통신 등은 7일 소식통들을 인용, 일본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측의 지재권 침해 제소와 관련해 제3자로 해당 협회에 참여할 방침임을 WTO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함.

■'일본판 해병대' 수륙기동단 발족식...섬 탈환훈련 공개(연합뉴스)

- 일본 육상자위대는 7일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 소재 아이노우라(相浦) 주둔지에서 최근 신설된 도서방위 전문부대 '수륙기동단' 발족 행사를 열고 섬 탈환 훈련을 공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야마모토 도모히로(山本朋廣) 방위성 부(副)대신은 도서방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문서 은폐 문제를 거론하며 "큰 위기감을 갖고 있으니 기분을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 수륙기동단은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 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에서 유사 사태 발생 시를 겨냥해 창설됐는데 이는 미국 해병대를 모델로 해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며 총 2천100명 규모를 갖고 있음.

2018. 4. 8.

■ **日언론 “한중일 정상회담 내달 9일 개최 최종 조정 중”(연합뉴스)**

- 한중일 정상회담이 내달 9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NHK가 8일 보도함.
- NHK는 일본과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15년 이후 열리지 못했던 3개국 정상회담 개최일이 이 같은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고 앞서 교도통신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내달 초중순 열릴 것이라며 “5월 8~9일 이틀간을 축으로 개최 시점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함.
- 회담이 성사되면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교도통신은 리 총리가 내달 9일 도쿄(東京)에서 3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양자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함.

2018. 4. 9.

■ **中언론, 日 ‘수륙기동단’ 발족에 “日군국주의 부활 경계해야”(연합뉴스)**

- 일본 육상자위대의 도서방위 전문부대인 ‘수륙기동단’ 발족과 관련해 아시아 각국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해야 한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9일 전함.
- 이 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이 지난 7일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해병부대를 신설했다”며 “일본 정부는 해병여단 발족이 군사적 필요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상륙부대가 일본의 이웃나라를 위협하는데 쓰일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함.
- 글로벌타임스는 2차 대전 전후 ‘전력(戰力) 보유 불가’를 명기한 일본 평화헌법 조항을 상기시키며 “해병대를 창설해 군사적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헌법에 위배된다.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영토 보존을 핑계 삼는다면 지역 국가들은 삼엄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함.

2018. 4. 10.

■ **中리커창, 일본 무역협회장 만나 “대외 개방 확대할 것”(연합뉴스)**

- 미중 무역갈등 속에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총리와 만나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 의지를 피력함.
- 10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고노 회장 일행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국제정세가 복잡하

계 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다자주의를 주창하고 다자 무역 체계를 지지하며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중국은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대외개방의 대문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면서 “일본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환영하며 발전 기회를 함께 개척해 호혜 공영하길 바란다”고 강조함.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IV 북한인권

■ 개요

| 분류 | 일자 | |
|----------------------------|---|--|
| 북한인권 국제동향 | 4.7. | 15회 북한자유주간 28일 서울서 개막...대북정보유입 초점(미국의소리) |
| | 4.9. | 美 국무부 "북한 정권 압박해 자국민 자유와 인권 존중토록 할 것"(미국의소리) |
| | 4.11. | 美 "북미회담 최대의제는 비핵화...인권문제 제기될 것으로 생각"(연합뉴스) |
| | | 국제 40개 인권단체 "남북정상회담에 북한 인권 포함해야"(미국의소리) |
| | | "인권, 비핵화 논의에 희생 안 돼...인도적 지원은 검증 중요"(미국의소리) |
| | | FAO-WFP "지난해 북 주민 1천만 명 식량난 겪어"(자유아시아방송) |
| | 4.12. | 美 국무부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 잊지 않을 것...엄청난 인권 유린 우려"(미국의소리) |
| 4.13. | 유엔인권사무소 "남북정상회담에 북한인권 포함돼야"(미국의소리) | |
| 북한인권 내부동향 | 4.12. | 앰네스티 "북한, 사형집행 여전...세계 추세 역행"(미국의소리) |
| | | 북한발 '슈퍼결핵' 경보...국제기구 철수에 역내 보건참사 우려(연합뉴스) |
| 북한인권 남한동향 | | 해당사항 없음 |
|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 4.10. | 10년간 유럽 시민권 얻은 북한 출신 820명...독일 396명 최대(연합뉴스) |
| | | 탈북민 창업 증가세...일반 한국인과 임금 격차 여전(미국의소리) |
| 4.11. | 탈북단체, 북 인권상황 담긴 '더 월' 영화 USB에 담아 보내기(자유아시아방송) | |
| 대북지원 | 4.9. | 전북도-북한 교류협력사업 기지개 켜나(연합뉴스) |
| | 4.12. | 유엔 "지난해 대북 인도지원자금 목표의 30%에 불과"(자유아시아방송) |
| | 4.13. | 유엔 "북한 주민 1천만명 이상 인도적 지원 필요"(미국의소리) |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4. 7.

■ 15회 북한자유주간 28일 서울서 개막...대북정보유입 초점(미국의소리)

-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존엄에 초점을 맞춘 연례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오는 4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개최됨.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와 집회가 계속될 예정임.
-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대표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 서 15번째를 맞는 올해 행사에서는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올해 행사의 주제를 ‘진실이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로 정하고, 북한에 정보를 들여 보내기 위한 탈북자들의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함.
- 솔티 대표는 올해 행사 중에 대북 풍선 보내기와 쌀과 이동식저장장치(USB)가 들어 있는 페트병 보내기 등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보내기 위한 탈북자들의 활동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음.

2018. 4. 9.

■ 美 국무부 “북한 정권 압박해 자국민 자유와 인권 존중토록 할 것”(미국의소리)

- 미국 국무부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6일, 미 의회 의원들과 인권 전문가, 미국 내 탈북인들 사이에서 인권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인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음.

2018. 4. 11.

■ 美 “북미회담 최대의제는 비핵화...인권문제 제기될 것으로 생각”(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비핵화가 최우선 의제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음.
-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5월 또는 6월에 북한과 정상회

담이 열리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보통 큰 견해 차이가 있는 나라들과 대화해 회담할 기회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언급된다. 나는 그 (북 인권)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언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다만 “북한이 비핵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임.

■ 국제 40개 인권단체 “남북정상회담에 북한 인권 포함해야”(미국의소리)

- 휴먼라이츠워치 등 40개 인권단체들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남북정상회담뿐 아니라 앞으로 북한과 진행하는 모든 회담에 북한인권 문제가 반드시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음. 문 대통령이 북한 사안이 의제에 포함되도록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임.
- 브래드 아담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지부장은 서한에서 “남북한 대화의 재개를 환영하지만 이 대화가 북한 내 열악한 인권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져야만 북한 주민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서한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엔의 인권 개선 권고 사안을 시급히 이행하고 남북인권대화 추진, 정보교환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협력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인권, 비핵화 논의에 희생 안 돼…인도적 지원은 검증 중요”(미국의소리)

-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소리(VOA)에서는 특집 기획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그 과정에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알아보았음.
-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탈북자 문제와 한국인 억류, 외국인 납치 등 북한의 인권 유린은 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면, 이는 북한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상회담 의제에 인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권 문제가 무시되거나 배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함. 킹 전 특사는 이산가족상봉 문제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는 직접적인 인권 문제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같은 맥락 안에 있는 문제라고 말했음. 또한 최근 한국예술단의 북한 방문은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 접촉을 늘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런 활동을

적극 추진해 북한인권 개선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8. 4. 11.

■ **FAO·WFP “지난해 북 주민 1천만 명 식량난 겪어”(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공동 발표한 ‘2018세계 식량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주민의 41%에 해당하는 1천 50만 명이 지난해 기근에 시달렸음.
- 이 수치는 FAO와 WFP가 정의하는 식량부족 단계에서 식량부족이 ‘걱정할 수준(worrying level)’인 2단계 이상을 합친 것으로 2016년보다 50만 명 더 늘어난 것임.
- 보고서는 이미 식량난이 만연한 북한이 심각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의 식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음. 또한 북한은 ‘외부식량 원조가 필요한 위기국(Countries in Crisis requiring external assistance)’으로 분류된 37개국에 포함됐음. 대부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이었고 파키스탄과 함께 아시아 국가로는 북한이 유일함.

2018. 4. 12.

■ **美 국무부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 잊지 않을 것…엄청난 인권 유린 우려”(미국의소리)**

- 미국 국무부가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음. 김정은 정권이 엄청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음.
-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전날 윌리엄 해거티 일본주재 미국대사와 만나 가족들의 목소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함.
-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국제적인 인권 의무를 준수할 것을 정기적으로 촉구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릴 것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2018. 4. 13.

■ **유엔인권사무소 “남북정상회담에 북한인권 포함돼야”(미국의소리)**

- 유엔인권 서울사무소는 12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국제인권단체들의 촉구를 지지한다고 밝힘. 사무소는 이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즈워치를 비롯한 40개 국제 시민단체가 최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오는 4월 27일 열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반드시 의제로 포함될 것을 촉구함.

- 시민단체들은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과 진행되는 모든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포함하고, 인권 개선 문제로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8. 4. 12.

■ 앰네스티 “북한, 사형집행 여전…세계 추세 역행”(미국의소리)

-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2일 북한에서 사형선고와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날 발표한 ‘2017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난 해에도 북한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보고들을 받았다고 설명함.
- 이 단체의 사형 전문가인 치아라 산지오르시오 고문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형 선고와 집행에 관한 북한의 상황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산지오르시오 고문은 북한은 국제법 아래서 사형으로 처벌되지 말아야 할 범죄들, 심지어는 북한법에서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계속 사형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밝힘.

■ 북한발 ‘슈퍼결핵’ 경보…국제기구 철수에 역내 보건참사 우려(연합뉴스)

- 북한의 결핵 퇴치를 지원해온 한 국제기구가 오는 6월 지원을 중단키로 하면서 세계 의료계에서 기존 의약품에 내성을 보이는 ‘슈퍼 결핵’의 창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하버드대 의과대학원 소속 전문의들이 북한에 대한 결핵퇴치 지원이 중단되면 “북한 전역에서 품질이 보장된 결핵 치료제의 막대한 품귀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 앞서 지난 2월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이하 세계기금)은 2010년부터 이어온 북한의 결핵·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을 오는 6월 중단한다고 밝힘. 세계기금은

자원 배치와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보장 및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중단 배경을 설명함.

- 의료진은 치료제 부족 탓에 의료진이 치료제를 배급하고 환자들은 필요한 복용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다제내성 결핵균이 급속도로 생겨난 전례가 있다고 서한에서 지적함. 세계보건기구(WHO) 집계에 따르면 2016년 북한 내 결핵 환자 13만여 명 가운데 5천700명은 결핵 치료제 리팜피신이나 최소 2가지 이상의 치료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2018. 4. 10.

■ 10년간 유럽 시민권 얻은 북한 출신 820명…독일 396명 최다(연합뉴스)

-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유럽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 유럽 국가의 국민이 된 북한 출신은 모두 820명인 것으로 집계됐음.
- 또 이들 가운데 90% 가까이가 독일과 영국의 시민으로 변신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럽의 시민권 획득은 귀화나 결혼, 망명 등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들 대부분은 북한을 탈출한 뒤 유럽에 정착한 탈북자로 추정됨.
- 유럽연합(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9일(현지시간) 발표한 ‘2016년 EU의 시민권 부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EU 28개 회원국을 비롯해 유럽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한 북한 출신은 모두 66명으로 드러났음.

■ 탈북민 창업 증가세…일반 한국인과 임금 격차 여전(미국의소리)

-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이 최근 발행한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임금은 일반 한국인들의 평균 242만3천원에 비해 약 60만원 낮은 178만7천원이었음. 다만 탈북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도 대비 약 15만8천원이 높아졌음.
- 남북하나재단은 임금을 받는 탈북자들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 탈북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74.9%)이 더 많은 점을 지적했음. 한국사회 내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의 격차가 반영됐다는 설명임. 한국인들에 비해 전체적인 근속연

수가 짧은 점도 임금이 낮은 배경으로 분석됐음.

- 남북하나재단측은 탈북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탈북자의 기초생활 수급은 8배, 실업률은 2배가 높다고 하며,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여전히 필요하고, 꾸준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음.

2018. 4. 11.

■ **탈북단체, 북 인권상황 담긴 '더 월' 영화 USB에 담아 보내기(자유아시아방송)**

- 탈북난민인권연합과 사단법인 큰 샘, 노체인 등 탈북 단체가 지난 2016년부터 페트병에 쌀을 담아 2년 동안 꾸준히 바다를 통해 보내는 쌀이 일부 북한 주민의 굶주림과 외부소식 갈증을 해소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음.
- 이번 행사에 참가한 노체인 정광일 대표는 오는 17일 행사에는 북한 체제와 비참한 인권실태 등을 비판한 더 월 영화(북한체제와 비참한 인권실태 등을 당도 높게 비판한 영화로 아일랜드의 권위 있는 영화제 중 하나인 제 26회 갠웨이 영화제에서 최고 인권영화상수상), 북한 일반 주민들은 보지 못한 남한 가수들이 북한에서 한 공연한 것 등 다양한 소재의 내용을 USB 담아 보낸다고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음.

5. 대북지원

2018. 4. 9.

■ **전북도-북한 교류협력사업 기지개 커나(연합뉴스)**

-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전북도의 대북 교류협력사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음. 전북도는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음.
- 남북 정상회담 등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재추진하기 위해서임.
-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2008년부터 10년간 총 98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모아둔 상태임. 도는 앞서 2004~2006년 황해남도 신천군 협동농장에 농기계와 농자재를 지원했고 2007년에는 평안남도 남포시 협동농장에 돼지농장을 지어 종돈과 사료 등을 농장 측에 전달한 바 있음.

2018. 4. 12.

■ 유엔 “지난해 대북 인도지원자금 목표의 30%에 불과”(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은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1억1천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힘. 유엔은 11일 발표한 ‘2018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DPRK Needs and Priorities 2018)에서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총 1억1천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함.
- 올해 예산을 통해 세계식량계획 등 북한 내 5개 유엔 기구와 5개 유럽 비정부기구가 1천3백만 명의 북한 주민을 지원할 예정임.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예산 1억1천400만 달러보다 300만 달러 줄어든 것이며, 2016년 1억2천100만 달러보다 700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이 1억1천400만 달러였지만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모금이 30% 밖에 되지 않음. 아울러 1천8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650만 명만이 지원을 받음.
- 올해 전체 예산 1억1천100만달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양사업으로 3천850만 달러가 할당됨. 이 자금은 어린이와 여성들에 대한 보조식품과 미량영양소 지원, 그리고 중증 급성영양실조의 예방과 치료 활동에 사용됨. 보건 분야에는 3천7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으로, 북한 보건기관들에 필수 의약품과 백신, 장비를 제공할 예정임.

2018. 4. 13.

■ 유엔 “북한 주민 1천만명 이상 인도적 지원 필요”(미국의소리)

- 북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유엔은 1천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며 1억1천100만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호소함. 전문가들은 지원은 필요하지만 철저한 감독을 촉구함.
-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12일 북한 인구의 40%인 1천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통계를 제시함. 하지만 이 같은 수치를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했는지, 북한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음.
- 특히 식량 부족으로 전체 어린이의 25% 이상이 발육이 부진한 상태를 보이는 등 영양부족이 계속 증대한 우려라고 밝힘. 또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임. 많은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식수 공급원 없이 살고 있고, 주민들의 약 4분의 1이 기본적인 위생시설 없이 살고 있는 등 보건상의 증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